

단돈 100원·300원으로 스트레스 해소 하려는 곳

박 영 식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장

학창시절 공부에 별런 취미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군 제대 후 퉁퉁 정신차린 다은 공직에 뚫을 던진 뒤 어언 18년째이다. 지방정부에서 나습대호 산전·수전·공수전을 다 겪었다고나 할까.

그런데 요즘 이따금 비애 같은 씁쓸함을 느낀다. 사회전반에 걸친 잉그러진 현상일테지만 다 내탓이려니 하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본다.

나의 공직 초년시절에는 그때도 공직자 많이나 홍보사항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었다. 솔직히 그때에는 믿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관료주의·권위주의 시대였다.

작금의 민은 공직자의 조그마한 흠경에도 관용이 없어져가고, 신하면 큰소리·삿대질·목지거리·상사욱박지르기 등 이른바, 역관료주의·역권위주의가 어느덧

팽배해져 갔다.

예를들면 주민등록·인감증명담당자가 바빠 민원서류 발급이 조금 늦어지거나 불친절하다고 생각되면, 여지없이 감정의 한살이 날아온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발급수수료는 100원, 인감발급수수료는 300원이다. 어떤 용감한(?) 민원인은 100원, 300원으로 완전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갔다(물론, 단순히 100원, 300원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이런 상황이 시리도록 엮어지면 퇴근길에 소주는 꿀맛이다. 폭탄주는 더 그러하다.

구태의연(관료주의·권위주의)과 작금의 세태(역관료주의·역권위주의)는 고쳐져야 한다. 민과 믿이 대등한 관계에서

人格적으로 대해주는 수준높은 상호대 등주의의 관계설정이 시급한 과제다.

진짜로 바꾸는건데!

이젠 민과 官이 쌍방향으로 웃으면서 서로 약간 손해보듯이 일처리가 되는 세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고객(주민)제일주의, 주인-머슴론 등도 이젠 다시 생각하여야 할 시점이다.

조만간 洞事務所에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시책들도 상술한 것에 근간을 두고 떠나야 할 소기의 성과달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각자가 (쌍방이) 100원·300원 어치의 일을 처리하면서 무시당하고 우쭐거리는 곳(동사무소)이 되지 않고, 진정한 주민자치 공간이 되길 기대해 본다.